

국감달군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구글·5G에도 십자포화

과방위 국감 첫날

박성중 의원 “네이버, 지위로 갑질”
 창업자 이해진 GIO 증인출석 요구
최기영 장관 “알고리즘 중립 어려워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해 보겠다”
홍정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추진해야”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부터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빚발쳤다.

이밖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野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맹비난... 이해진 GIO 출석 요구 빚발쳐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흥기”라며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AI라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 안다”며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러한 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네이버 증인 출석 요구가 빚발쳤다.

국민의힘 정책기획위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네이버는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조

작했다”며 “유력 포털사의 알고리즘에 대한 가치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고의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기본 AI 윤리를 개정하는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의 “과기정통부가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에 비판 잇따라... '실태조사 이달 말 끝낼 것'

아울러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구글 인앱

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최기영 장관은 구글이 최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다는 질문에도 “길게 보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그간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ICT 업계에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로 앱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자 위치를 남용하고 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앱생태계의 파괴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형태의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구글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도록 끌고 가야한다”며 “정부가 전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보살핌이나 방패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 기업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며 “이달 말 정도 끝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열렸다. 당초 과방위 의원들은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정책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5G 고가요금제 질타 잇따라... '5G 28㎐ 대역은 B2B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이밖에도 고가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와 5G 주파수 대역인 28기가헤르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5G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안되는데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건 지나치다”며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의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을 25%까지 상향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이를 모르고 가입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 또한 온라인 가입을 활성화해 요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주파수의 한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는 현재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사용화했고 현재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윤 의원은 “전세계 5G 흐름을 보고 정부가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B2B 영역으로 28㎐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28㎐는 전국민 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며 “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업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망 설치 여부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신보·코트라 등 중기부 이관 이슈로 부각할 듯

오늘 중기벤처부 국감 쟁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문제 등 관련 정책·예산 대응 검증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가 8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어떤 쟁점들이 부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데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두루 아우르고 있는 등 이해관계 폭이 매우 넓어 관심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7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에 대한 이번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책·예산 대응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또 박영선 장관이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본격화한 ‘박영선표 정책’으로 꼽히는 자상한기업, 가치삼시다. 브랜드 K 등에 대한 조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권이 후반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로 격상시킨 중기부의 향후 소관법과 조직체제도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중기부가 국감에 앞서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배정된 소상공인진흥기금만 9조669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기부는 약 90%의 예산을 집행한 상태다.

10조원에 가까운 이들 예산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소상공인 지원 등 융자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교육·재기·디지털화 등에 주로 쓰인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다. 소상공인체감경기(기준점 100)는 코로나 발발 직후인 2월 당시 41.5를 기록했다 3월에는 29.7까지 추락했다. 다만 정책 지원 등

으로 반등해 5월 당시 기준점에 가까운 88.3까지 올라갔다 7월에는 68.1로 주춤했다.

중기부는 이런 가운데 최근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5700억원의 예산을 배정,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을 소상공인들에게 쏟아붓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적절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내용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박영선 장관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산자중기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준말인 ‘자상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18호 기업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호 기업인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65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한쪽에선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다른 한쪽에선 불공정 행위로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지적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가치삼시다’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가치삼시다’ 플랫폼 입점기업 1215곳의 매출을 전수 조사한 결과 70% 정도인 829곳은 매출이 ‘제로(0)’였다. 아울러 국민들까지 참여해 대거 뽑은 브랜드K 제품에 대해서 일부에선 후속 지원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 부처 소관법이나 산하기관을 조정해 중기부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 산하였던 기술보증기금이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부로 이관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을 추가로 옮겨야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의 중기부 이관 문제도 쟁점이다. 이를 놓고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이관 불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계 곳곳을 두드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산자부와 중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놓고도 서로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역시 중기부로 옮겨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